

# 남북자·6자 회담등 '낮은 수준' 합의

## 남북장관급회담 성과와 전망

### 한강하구 이용·자원공동 개발안 반영

### 남북철로 개통 문제 등은 후일로 미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처음으로 집어넣은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으로 17차 회담의 결과들이 다시 반영된 '낮은 수준'의 합의로 평가된다. 우리측이 새롭게 제안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안과 민족공동의 자원개발안이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이나, 수차례 합의하고도 이행되지 못한 철도도로 개통 문제를 다시 5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협의사항으로 미뤄 놓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종결회의를 8시간 가까이 미뤄가며 밀고 당기기가 계속된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우리측이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도 불사하겠다는 해결 의지를 강조한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북한이 내세운 5개항의 '근본적인 문제'였다.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북측이 내세운 5개항에는 ▲참관지 자유방문 ▲합동군사연습 중지 ▲제한없는 투자·협력 ▲당국 대표단이 주도하는 6·15행사 ▲북도 문제에 대한 매일 공동대응 등 난제들이 수두룩했다.

결국 남북자문제는 공동보도문에 "남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상징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들어갔다.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체에 속하면서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 '실질적으로 해결'이라는 표현은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었던 적십자회담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다.

### 장관급회담의 8개항

- 1 6·15 선언 실천 조치 협력
- 2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 3 한반도 비핵화 노력
- 4 6·15 선언 행사 참가
- 5 남북 경제협력 실현
- 6 남북자 문제 해결 협력
- 7 자연재해 방지사업 추진
- 8 7월 부산서 19차 회담

평화의 제도화 분야에서는 6개월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북핵 6자 회담과 관련, 9·19 공동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적으로 해결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 역시 정치군사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가 부각됐다. 우리측이 제안한 한강하구 공동 이용안과 함경남도 단천 지역에 대한 민족자원공동개발 특구 지정안이 공동보도문에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

이다. 이는 남북경협이 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상호 이익이 돼야 한다는 기초 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천특구의 경우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라는 표현으로 소화되면서 '단천'이나 '특구' 등 구체성과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단어가 빠져졌지만 북측도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비춰 전망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합의사항을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에 달려 있다. 우선 남북자 문제는 7월 제19차 장관급회담에 앞서 6월로 잡혀 있는 제8차 적십자회담에서 먼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남북자 문제의 해결과 연계한 우리측의 과감한 대북 지원과 우리측에 남아 있는 장기수용복송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적십자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북측이 그동안 남북자 문제에 대해 보여온 거부감과 일본인 남북자 문제 해결과정에서 초래된 여론의 역풍 등은 북측의 '통 큰 결단'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돼 북측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연남뉴스

# 특별당비 없애고...세비 내놓고

## 민주당 '4억 공천헌금' 수습 안간힘

## 전남지역 의원들 대처방안 반발도

민주당이 조재환 사무총장 공천 자금 수수 파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앙당을 조기에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체제로 개편하고 천막당사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도 걸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재환 사무총장 공천 자금 수수 파문과 관련한 중앙당의 대처 방식에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심각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25일부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를 일절 받지 않는 등 조재환 사무총장 공천 자금 수수 파문과 관련한 수습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은 25일 대표단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할 후 한화갑 대표

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인기, 이낙연, 신중식, 이정일,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를 천막당사에서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금 무리한다면 현재의 중앙당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천막당사에서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대표단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특별당비를 걸지 않는 대신, 직접 몸으로 유권자들을 만나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금이 없다면 몸으로 직접 뛰는 것이 지역민들의 표심을 움직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당의 자금사정을 고려, 다음달 세비를 지방선거 자금으로 전액 내놓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재환 사무총장 공천 자금 수수 파문에 대한 대처 방식과 관련 한화갑 대표와 전남지

역 현역 의원들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한 대표는 김효석 의원이 조재환 사무총장의 사건과 관련 개인적인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당의 일은 당에서 해야지 뒷구멍에서 비난하고, 전부 한건주의로 나오는 등 공동체 의식이 없다'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지역 현역의원들은 대표단 회의 직후 한 대표만 제외하고 따로 만나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 공개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지금까지의 한 대표 체제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나타내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상당한 내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일신하고 지방선거에 매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대표가 당무 일선에서 물러선다는 점에서 조재환 사무총장 사건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일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는 고려호텔회담장으로 권호용 북측단장(왼쪽)과 이종석 남측수석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비자금 용처·로비 의혹 밝혀질까

##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 출두

24일 검찰에 소환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조사 내용은 ▲비자금 조성 지시 ▲경영권 승계 비리 ▲부채탕감 로비 ▲김재욱씨 로비 의혹 등 4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현대차 계열사의 비자금은 현대차 본사 기획총괄본부와 재정본부의 지휘 아래 글로벌 비스와 현대오토넷, 현대모비스, 기아차, 위아 등이 조성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 24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각 계열사들이 하청업체와 거래한 내역을 부풀려 조성된 비자금은 현대차 본사에 저장해두고 정 회장의 총괄 지시 하에 자금 관리자와 전달자가 역할을 분담해 집행하는 구조로 활용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조사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조성 방법, 규모 등을 파악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비자금이 사용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 조사가 가장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현대차 비자금이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 제공된 대선자금 일부라는 '2002년 대선자금 잔금설'이 정 회장 조사에서 규명될지도 관심사다.

<경영권 승계 비리>=경영권 승계 비리의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현대오토넷에 인수합병된 본택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글로벌비스 및 헬갓 인수 의혹이 일고 있는 위아 등 3개 회사가 유력하다.

정의선 사장은 2001년 말 본택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해 15억원으로 이 회사 지분 30%를 확보했으며 2005년 9월 이 지분을 주당 9만5천원에 독일 지멘스사에 팔아 570억원을 챙겼다.

본택은 불과 두 달 뒤 현대오토넷에 합병될 때 주당 23만3천553원으로 평가돼 지분 매각 당시보다 2.45배가 높게 평가됐고 이로 인해 본택 지분 30%를 갖고 있던 글로벌비스 가치도 상승해 글로벌비스 대주주인 정의선 사장이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었다.

<부채탕감 로비>=현대차 측이 김동훈 전 안전회계법인 대표에게 41억6천만원의 거금을 제공하면서 옛 기아차 계열사였던 부실기업들의 채무를 탕감받도록 로비를 부탁했다는 혐의도 정 회장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위아와 아주금속공업, 본택, 카스코 등 기아사태 때 화의결정이 내리진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앞세워 화의채권을 편법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실채무를 털어버렸다는 의혹이다.

<김재욱씨 로비>=김재욱은 일단 김재욱씨가 현대차 그룹 양재동 사옥 부지 매입과 신사옥 증축 과정 등에서 현대차 비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해왔지만 이는 김재욱씨 로비의혹의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씨가 아더엔터스 한국지사장 시절 현대차 그룹 컨설팅을 맡았던 인연 등에 비춰볼 때 현대차의 계열사 확장 과정 등에서도 로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빠가 말해줬어요  
우리는 중무공의 후예라고

HHI 로고와 기타 텍스트는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